

박지원 “MB 불법사찰 의혹, 정보위 의결하면 보고”

국정원장 업무보고... 여당이 요구한 문건, 대상 인원·목록 미제출 “사찰정보 불법... 당시 靑 정무수석실·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

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08년 2월 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흑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원장은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제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내부에 전담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

성해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15일 현재까지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으며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 41건을 처리 중이다

고 보고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전 의원 등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여권 잠룡들, 이재명에 견제구?

이낙연·정세균·임종석, 기본 소득 비판... 경선 연기론은 사실무근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달아 비판을 나서면서 사실상 협공 전선이 형성됐다.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에 일일이 응수하기보다는 제도의 필요성과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16일 통화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며 “자주 싸우다 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경선 연기론에는 황당해하면서 당내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대선 6개월 전 후보를 선출하게 한 것은 경선 이후 당과 후보 캠프가 충분히 결합할 시간을 주자는 것인데 이제 와서 연기하자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 제기하는 탈당설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공개적으로도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며 탈당설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에 집중하며 정책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지율 선두 주자인 이 지사의 유력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전체 복지체계 및 국가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브랜드인 신복지제도를 비롯해 주자 간 복지 정책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논쟁이 공경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고리로 반(反)이재명 전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책 경쟁과 정치적 연합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반이재명 전선의 실체는 없다”며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기인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 지사의 가장 큰 시련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與 ‘檢수사권 완전박탈’ 1년 유예 검토

개혁특위, 6대 범죄 수사권 이관법안 상반기 내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가칭 수사정법)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느냐, 더 늦춰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1년보다 짧게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임기 등으로) 유예기간은 길게 두자는 말자는 것이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 특위는 현재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별도 기구로 옮기는 수사정법을 이달 중 발의해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1년여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수사기구인 가칭 ‘수사청’이 탄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

특위 관계자는 “이달 내에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위기의 관광업계 정부 지원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6일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간한 ‘전국여행업계실태전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 1만 7664개 업체 중 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업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3차 대응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1월 이후 관



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이들 관광업계, 여행업계 종사자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삼석 “농식품부, 농민 지원보다 물가만 걱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농축수위 상임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지만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 값에 비견되는 수준일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물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인데 비해 달걀은 3.36배에 그쳤다. 서 의원은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이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